

# 이태원 참사 국조 계획서 국회 통과

### 본회의 열고 의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 활동 기관보고·현장조사·청문회, 예산안 처리 후 실시 미성년자 및 대물림 방지 민법 개정안 등도 통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적의원 25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명으로 의결했다.

민중당 소속 의원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김기현·김희국·박대수·박성중·서병수·이주환·장재원·조경태·윤한홍·이용·한기호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조 의원은 표결 전 반대토론에서 "국정조사 안은 특보다 실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강기운·김성원·김영식·김용·박수영·서병수·서정숙·염태영·유경준·유상범·이달곤·이명수·이용호·입이자·정동만·정운천·조명희·조은희·최승재·최준식·홍석준

의원은 기권했다.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이날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총 45일간 진행된다.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 본격적인 조사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진행되며 조사위원회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가능하다.

국정조사 범위는 △참사 직·간접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참사 발생 전후 경찰·소방·행정·보건·의료 등 인력 배치·운용 적정성 △사고 은폐 축소·외국 등 책임 회피 의혹 △희생자·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시민 피해 지역 등에 대한 지원 대책 점검이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대검찰청·경찰청·소방청·서울특별시·용산구·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서울종합방재센터·서울소방재난본부·용산소방서·서울교통공사 등이다.

다만 여야는 전날 조사 대상 기관으로 합의한 대검찰청을 두고 오전 내내 실랑이를 벌이다가 대검찰청 대신 대검찰청 미야진담부서로 조사 대상을 한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질의 역시 미야수사 관련 질의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회는 또 윤석열 정부 초대 대법관으로 지명된 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재적의원 278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정한 지 120일만이다.

국회는 이외에도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 문제를 방지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미성년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의 빚을 모두 물려받게 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미성년자 상속인은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한정 승인이 가능하게 됐다.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별도의 감호위탁 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동물원·수족관 등 특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동물원 수족관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구비 횡령으로 사기 혐의가 인정돼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사립대학교 교수를 퇴직 대상으로 규정하는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 외국인등록증에 대한 진위확인 정보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이와 함께 국회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2022년 무역보통계약 체결 한도 조정 등에 동의안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정부 현장실습 활성화 등을 위한 국회 결의안, 2021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했다.

### '아동폭력 근절, 모두의 관심으로부터'

####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온라인 캠페인 동참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은 아동폭력 근절 온라인 캠페인(END Violence)에 23일 동참했다.

캠페인은 아동·청소년을 향한 모든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의교부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펼치고 있는 인식개선 활동이다.

또 웰린지 로고와 함께 찍은 사진 또는 영상을 아동폭력 근절에 관한 메시지를 SNS에 게재하고 캠페인을 이어갈 2명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범기 전주시장의 지목을 받은 이기동 의장은 아동학대 예방주간을 맞아 아동폭력 근절에 대한 지역사회의 폭넓은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며 다음 주자로 전주시의회 김동현 운영위원장과 쿠키아너 김경환 본부장을 지명했다.

이기동 의장은 "아동폭력 근절은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차라리 아이들이 행복한 전주를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농식품부, 농기자재 국제워크숍 28-2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2 농기자재 국제워크숍(이하 워크숍)'을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병행 오는 28일과 29일 양일간 개최한다.

올해로 제6회째 맞는 워크숍은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사료, 친환경농자재, 시설자재, 동물용의약품' 등 농기자재 8개 분야의 수출 활성화에 필요한 농기자재 산업 현황과 관련 제도 등 수출정보를 공유하고 국내외 수출 네트워크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산산출물 전시회 모습. 이날 행사에는 농산물, 가공식품, 농기계 등 다양한 국산산출물이 전시되어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제화 해야”

###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서 축구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전주12)은 24일 경남 진주 동방관광호텔에서 열린 제6차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날 국주영은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유일한 장치인데도 법적 근거가 없고 검증 결과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부 지역은 청문 내용이

에 대해선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산하기관 등의 임직원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홍보와 함께 고향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활체육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17개 시도별 내년 예산에 아태마스터스대회 참가선수단의 체재비 지원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김경수 기자



국주영 의장. 이날 행사에서 인사청문회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력을 통해 사립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만큼 그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산하기관 등의 임직원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서 축구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전주12)은 24일 경남 진주 동방관광호텔에서 열린 제6차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날 국주영은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유일한 장치인데도 법적 근거가 없고 검증 결과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부 지역은 청문 내용이

## 도내 동물보호센터 운영 실태 합동점검

전북도는 유실·유기동물 구조, 치료, 보호를 위해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의 관리감독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12월 16일까지 3주간 도내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내 동물보호센터는 26개소로 정읍, 무주, 장수, 순창 4개소는 시·군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2개소는 동물병원 및 법인, 단체 등을 지정·위탁해 운영 중이다.

이번 점검은 도·시·군 합동점검으로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시설 및 운영기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보호동물의 개체관리, 질병치료 등 위생적 보호상태를 확인하고 유기동물의 구조·포획, 사육, 인도적 처리 등 보호비용 청구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점검하게 된다. /김경수 기자

## “안전사고 우려... 대둔산 도립공원 일원 사방시설물 설치를”

### 권요안 도의원, 사방댐 사업 대상지 찾아 현장 의정활동 나서

####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인해 계곡부 주변으로 호텔 등 유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완주군 대둔산 도립공원 일원 사방댐 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현장에는 권요안 도의원을 비롯해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김규성 의원, 완주군 운주면 주민 산림환경연구회 및 완주군 대둔산공원 관리팀장 등이 참여해 현장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권 의원은 "매년 대둔산도립공원에 40만 명이 이르는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사방댐을 비롯해 0.5km에 이르는 계류보전 시설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장에 참석한 산림환경연구소 관계자는 "주민과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사방댐 시설이 조속히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요안 의원은 "사방댐은 잦은 홍수로 인한 산사태로 주택 파손, 농경지 유실 등 재해를 예방하고 산물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급수로 대처가 가능해 사방시설물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요청하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권요안 의원. 이날 현장에는 권요안 도의원을 비롯해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김규성 의원, 완주군 운주면 주민 산림환경연구회 및 완주군 대둔산공원 관리팀장 등이 참여해 현장을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 조례 제·개정 기법 특강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 조례연구회는 '의의 역량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례 제·개정 기법' 특강을 전주시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24일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의정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 제·개정에 대한 실무 기법과 노하우를 익히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특강을 비롯해 지속적인 역량 강화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는 각오다.

이번 강의는 제8·4·5대 도봉구의회 의원, 제8·9·10대 서울특별시 의원을 역임했으며, 전국 최연소 의장(제4대 도봉구의회 의장 만희세) 기록을 가지고 있는 김용석 전 서울시원이 맡았다.

김용석 전 의원은 "효과적인 조례의 제·개정을 위해선 의원들의 많은 고민과 관심이 필수적이다"며 "지역 중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 조례연구회는 '의의 역량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례 제·개정 기법' 특강을 전주시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24일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의정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 제·개정에 대한 실무 기법과 노하우를 익히기 위해 추진됐다.

##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 마을버스 운영 현황 점검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선전 의원)는 전주시 외곽지역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 마을버스의 운영 현황을 지난 23일 점검했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 시간제 도입에 맞춰 시 외곽지역 마을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지난 2020년 도입되어 현재는 20개 노선 14대의 버스가 운행 중이다.

이날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은 각 노선의 버스를 직접 탑승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없애는 버스의 정시성과 운행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여러 정류장을 거쳐 월드컵경기장 회차지로 다시 돌아온 의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건의하며, 마을버스가 더 좋은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선전 의원)는 전주시 외곽지역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 마을버스의 운영 현황을 지난 23일 점검했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 시간제 도입에 맞춰 시 외곽지역 마을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지난 2020년 도입되어 현재는 20개 노선 14대의 버스가 운행 중이다.

##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 3%에서 5%로 상향

### 민중신영대 의원 '청년고용 확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민중신영대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북 군산·민중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3일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청년 의무고용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의무적으로 청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되어있

다. 그러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중 60곳이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청년 신규고용도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청년고용 의무제를 미이행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해당연도 고용의무 불이행 시무서와 차해연도 고용의무 이행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고용의무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신영대 의원은 "공공기관과 정부 등 공공부문이 선도해 청년고용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라며,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중신영대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북 군산·민중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3일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청년 의무고용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